

환경오염 방지용품 6개 관세감면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실린더 브래킷 등 6개의 환경오염 방지용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 방지용 물품은 모두 68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이번에 감면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실린더 브래킷과 온도자동 조정기, 압력센서, 관연결구 등 천연가스 차량의 제작에 필요한 4가지 부품과 폐피혁 재활용 설비와 폐합성수지 용융압출기 등 폐기물 처리용 물품 2가지다.

환경부는 그러나 송풍장치 댐퍼

등 2가지는 국산화가 이뤄짐에 따라 이번에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FRP오수처리시설 대부분 불량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오수처리시설 대부분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2일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하동군과 남해군 등 서부경남지역 6개 군지역의 FRP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8%가 불량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하동군은 전체 배출건수 266개소 가운데 225개소, 남해군 140개소 중 128개소, 거창군 157개소 중 122개소, 함양군 30개소 중 26개소, 합천군 16개소 중 16개소, 함안군 20개소 중 20개소가 불량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량 FRP오수처리시설은 두께를 최소 9-13mm까지 만들도록 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어기고 4-5mm로 얇게 만들었으며 대부분이 미생물처리 방식이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편모성 섬유를 사용해 야 하는데도 나일론재질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이 찢고 러져 소통이 되지 않는 데다 미생물이 제대로 살수 없어 정화되지 않은 오수나 축산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에서 불량 FRP오수처리시설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없이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질정기검사에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곳도 남해군 5건, 함양군 2건에 불과해 관계기관의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암행어사” 출동요...환경부 46명 투입 한강 등 4대강 감시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에 환경 암행어사가 뜬다.

네 강 주변의 환경 오염 업소를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봐주기 식 오염 단속을 감시한다.

주로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느슨하게 운영되던 기존의 환경감시대가 지난 8월 20일 환경부 정규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유역 환경청별로 10~14명씩 모두 46명으로 오염사범을 붙잡아 수사하는 사법경찰권을 가졌다.

이들은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6명)을 중심으로 오염이 우려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에 환경 암행어사가 뜬다. 네 강 주변의 환경 오염 업소를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봐주기 식 오염 단속을 감시한다. 주로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느슨하게 운영되던 기존의 환경감시대가 지난 8월 20일 환경부 정규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되는 시기와 지역을 선택해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하게 된다.

지자체가 오염업소 단속을 소홀히 할 때 이를 견제하기도 하고 하류지역 지자체에서 상류지역 지자체에 오염 단속을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환경영향평가 빨라진다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간을 단축해 해당사업의 착공지연을 막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에서 7억 400만원을 투입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간을 전당 평균 454일에서 390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인력·예산 부족으로 검토 및 협의 때 많은 시간이 걸려 착공지연, 예산이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예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지원되면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가 내실있게 이뤄지며 협의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업체들 분리수거 비상

식품업체들은 내년부터 환경부가 컵라면 용기와 과자봉지를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추가로 재활용 부담비용을 지출하는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라면과 제과업체들은 주력 제품의 대부분이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로 생산단가에 포함돼 라면과 과자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심 삼양 오투기 등 대부분의 라면 회사들은 기존의 폴리스티렌(PSP) 컵라면 용기를 부식이 가능한 종이나 식물소재(갈대)를 활용한 용기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컵라면 부문에서 연간 2500억원 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심(www.nongshim.co.kr)의 경우 9월초 현재 생산물량의 90% 이상이 폴리스티렌 용기로 제작되며, 종이와 식물소재 용기는 생생우동 큰사발, 푸파마당면 큰사발, 콩라면컵 등 일부 제품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이나 식물소재의 용기는 일반 폴리스티렌 용기보다 제

조단가가 평균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과자봉지는 컵라면과 달리 유예기간을 1년 두고 2004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85년부터 빈병을 재활용하고 있는 소주회사들의 경우도 빈병 회수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공병보증금제도에 따라 주류 도매상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인 규제 3-4배 강화

상수원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와 인에 대한 환경규제가 오는 2004년부터 3-4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섬진강 등 주요 수계에서 부영양

식품업체들은 내년부터 환경부가 컵라면 용기와 과자봉지를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추가로 재활용 부담비용을 지출하는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라면과 제과업체들은 주력 제품의 대부분이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의 처리기준을 현행 리터당 60mg에서 2004년부터 20mg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인의 처리기준도 현행 리터당 8mg에서 2mg으로 4배 강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업소는 관련 시설의 설치와 폐수처리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남해 하수처리장 97곳 새로짓기로

환경부는 적조 취약지역인 남해 연안에 2005년까지 면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44곳, 주요도시의 중·대형 하수처리장 53곳을 새로 짓는 등 적조방지 대책을 수립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88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환경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환경 분야 최대 애로사항으로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수질(29.6%), 대기(22.7%) 문제 등을 들었다.

다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적조방지 대책은 남해연안 14개 소규모 시·군지역을 집중 관리, 2117억원을 투자해 면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44곳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2005년 남해연안 면단위의 하수 도보급율도 8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영양염류 저감대책을 추진, 낙동강 심진강 등 주요수계 생활하수의 처리기준을 2004년부터 3~4배 강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폐기물처리·중복단속 최대애로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와 행정관청의 중복단속 문제를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88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환경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환경 분야 최대 애로사항으로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수질(29.6%), 대기(22.7%) 문제 등을 들었다.

한국의 환경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58.0%)' '너무 엄격한 편(9.1%)'이라는 응답이 67.1

%에 달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각종 환경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행정관청의 환경지도·단속에 대해 중복단속(29.5%)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26.1%), 빈번한 지도점검(21.6%)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급히 완화돼야 할 행정규제로는 과다한 법규(42.1%), 복잡한 인허가(19.6%), 엄격한 환경기준(11.4%) 등이 꼽혔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로의 환경관리업무 이관과 관련, 조사대상의 38.6%가 환경지도·단속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31.8%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환경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단속이나 처벌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환경개선 지원(39.3%), 현실을 감안한 법·제도 정비(33.3%),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13.1%)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규 근거없는 규제협약 무효"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업체. 시민단체등과 별도 협약을 맺어 기업이나 국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효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유 차량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 달 19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자동차업계 및 시민단체 34개 등이 참여해 맺은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시정토록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약을 맺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명백한 이중규제"라면서 "환경부는 경유 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나 권고조항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는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규개위의 지적은 규제의 내용보다 형식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이와 같은 규제강화 내용을 법규에 반영, 개정안을 마련하면 규개위와 재협의를 가능하다.

앞서 산자부·환경부·자동차업계·시민단체 등은 협약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트라제(현대차)는 적절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카렌스 II(기아차)는 연말까지만 생산하며 ▲자동차 업체들은 전체적인 자동차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기로 합의했으나 자동차 업체는 '이중규제'라며 규개위에 협약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중금속 폐수 무단방류
30개 업체 적발**

기준치의 최대 5천 배가 넘는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낙동강으로 무단방류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상우·주임검사 이철희)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낙동강 권역의 폐수배출업소 80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 결과 지천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아연, 크롬 등이 함유된 도금폐수를 낙동강에 몰래 방류해 온 30여개 업체를 적발, 부산 사상구 학장동 T사 대표 김모(41)씨등 14개 업체 대표들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량의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가 인정되는 2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도금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기준치의 43~72배인 시안과 아연, 크롬 등이 함유된 폐수 1천282t을 회사 내 수중 양수기를 이용해 감전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상구 감전동 D사 실제 대표 채모(61)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치의 50~296배가 넘는 크롬, 아연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폐수 950t을 하수구를 통해 인접한 낙동강으로 몰래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상우·주임검사 이철희)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낙동강 권역의 폐수배출업소 80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 결과 지천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아연, 크롬 등이 함유된 도금폐수를 낙동강에 몰래 방류해 온 3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

전국에서 환경호르몬 32종 검출

전국에서 모두 32종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특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서는 다이옥신이 전년에 비해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의 대기 26곳과 수질 43곳, 토양 35곳, 하상 퇴적물 11곳 등 115개 지점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94개 물질의 환경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32개 물질이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호르몬인 동시에 맹독성 발암 물질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다이옥신의 경우 대기 중 전국

평균 농도는 0.287피코그램(pg-TEQ/l)으로 일년전 조사때의 0.324pg보다 낮아졌다.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공업지역인 경기도 안산시원시동으로 1.664pg을 기록했고 다음은 안산시 고잔동(0.861), 시흥시 정왕동(0.837), 도로 변인 인천 석바위(0.798) 등의 순이었다.

수질과 토양의 다이옥신 농도도 다소 감소했지만 강이나 호수의 바닥을 이루는 하상 퇴적물의 다이옥신 농도는 0.086pg로 1년전의 0.048pg보다 늘었다.

한편 수질중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평균농도 0.946pg)으로 1년전의 0.062pg보다 15배 가량 늘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인 지역의 난개발로 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9년 시작해 2008년까지 계속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 등이 참여했다.

환경오염관리 이달부터 지자체

환경오염 사전예방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배출업체 단속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8개 지방환경청을 유역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오염배출업체 단속기능은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부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10명)를 신설하고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으로 전환하며 경인, 원주, 대구, 전주 등 4개 환경관리청은 지방환경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개 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97명)을,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총량과(6명)를 각각 신설하고 4대강 수질검사소를 물환경연구소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10월부터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업무를 지방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함에 따라 시도단속인력 86명을 지자체로 이관하되 지자체의 단속소홀 등에 따른 문제점을

환경부는 10월부터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업무를 지방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함에 따라 시도 단속인력 86명을 지자체로 이관하되 지자체의 단속소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4대강 환경감시대(46명)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4대강 환경감시대(46명)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했으며 본부 감사관실에 이를 총괄·조정하는 중앙환경감시기획단(6명)을 설치했다.

화학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대구지방환경청은 10월부터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환경부에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9월말까지 업무인수·인계반을 구성, 운영했다.

시·도에 이관된 업무는 대기 및 수질, 유해화학물질 관련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비산먼지 발생 업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생활악취, 유독물 등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다.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관련 업무는 시·도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된다.

또 환경청은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공백을 틈탄 배출업소의 폐수 무단방류 등을 막기 위해 시·도, 낙동강환경감시대 등과 배출업소 특별단속반을 편성, 9월 한달간 대대적인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벌였다.

환경청은 적발업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배출부과금

부과, 언론 공개, 적색업소 분류 등 강력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환경부담금 부과 8년만에 40배 급증

정부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건수가 시행 8년만에 40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93년에 22만5000건에 불과했던 부과규모가 지난해에는 861만5000여건으로 8년만에 38.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과 금액도 398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12배 늘었으며 징수액은 385억원에서 4087억원으로 11배 늘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93년 97%에서 지난해 8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인이나 사업장이 그에 합당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모인 돈은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된다.

울산시, 환경 위반업소 3개소 적발

울산시는 지난 8월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3개 업소를 적발, 폐쇄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탐가드공업사(대표:허영석)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7.5Hp)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주)유니온테크(대표:조한재)는 방지시설인 흡착시설(200m³/분)을 훼손 방치해 오다 적발돼 경고와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언양병원(대표:임봉열)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건수가 시행 8년만에 40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93년에 22만5000건에 불과했던 부과규모가 지난해에는 861만5000여건으로 8년만에 38.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폐수·먼지 과다배출
10개 업체 적발**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지난 7월 한달간 광주·전남지역 지역 산업 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광주 광산구 D금속 등 10개 업체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

영하다 적발된 영암군 삼호면 M업체와 공공수역에 유류를 흘려보낸 여수시 화치동 H업체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또 기준치를 넘어 폐수를 방류한 D금속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0일,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C업체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

행하지 않은 K업체는 이행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억제조치가 미흡한 S업체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영산강환경감시대도 7월중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72개소를 조사, 지정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화순군 화순읍 R업체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경퀴즈 정답 및 풀이

<p>문제 26. ②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처리할 경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과하는 비용. · 배출부과금 :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량과 초과농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 샘물(생수)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시·도 지사가 판매가액의 20%를 부과하고 있 	<p>는 제도.</p> <p>문제 27. ④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물이용 부담금은 톤당 80원이었으나 2001년 1월부터 톤당 110원으로 인상되었음. <p>문제 28. ③</p> <p>문제 29. ③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놀은 석탄산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화학공장 석탄가스나 콜크제조 공장의 배수중에 포함되기 쉽다. 무색으로서 물에 녹으면 약산성이 되는데, 피부에 접촉되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서는 소화기나 신경계통에 장애를 일으킨다. 미량 	<p>일지라도 악취가 나며 활성탄에 흡착된다.</p> <p>문제 30. ①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연간 가정에서 소비되는 수도물량이 약 25억톤으로서 우리나라 수도물 전체 사용량의 67%를 차지함. <p>문제 31. ②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1년간 가정에서 25억톤의 수도물이 소비되었고, 이를 국민 1인당으로환산하면 하루 약 200l에 해당함.
---	---	--